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46-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선호하는 개혁 방향

2023. 09. 06.

담당자 이승찬 연구원

전화 | 02-3014-0054
e-mail | sc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선호하는 개혁 방향

주요 결과

- 성공적인 연금 개혁을 이뤘다고 평가받는 해외 사례를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의지, 사회적 합의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연금 제도는 국민 대다수가 가입 대상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한국의 경우 지난 1년간 연금 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어져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연금을 3대 개혁에 포함하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국회는 여야 합의 하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양한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노력에 비해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연금 제도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를 알아보기로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지난 7월 21일 ~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 1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50대 이하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더욱 낮아졌다. 특히, 만18-39세는 3명 중 2명(68%)이, 40대는 57%가 '수급 연령이 돼도 국민연금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응답하며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쳤다.
- 청년(만18-39세)의 79%는 국민연금이 젊은 층과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답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의 52%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현재까지 낸 돈을 돌려 받고,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다고 말했다.
- 월보험료 인상 시 선호하는 개혁 방향은 노후소득 보장안(더 내고 더 받기) 47%, 재정안정 강화안(조금 더 내고, 현재 수준만큼 받기) 53%로 의견이 분분하다. 세대별로 나누어 봤을 때 60대 이상은 노후소득 보장안을, 50대 이하는 재정안정 강화안을 더욱 선호해 세대 간 차이가 확인된다.
- 국민의 대다수(84%)는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연금 개혁을 책임지고 주도해야 하는 주체로 대통령(44%)보다 국회(56%)를 더 선호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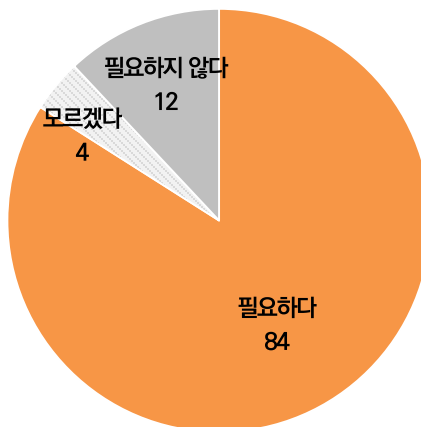
국민연금 인식 변화

**국민연금 제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84%),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커져
만 18-39세(68%), 40대(57%) 과반 이상이 '수급 연령이 돼도 국민연금 받을 수 없을 것'**

국민의 84%는 질병·노령·장애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사회보장제도로서 작용하는 국민연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대수명마저 점증하고 있기에 연금 제도의 필요성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기금 고갈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동전의 양면처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불안감도 불어나고 있다.

(단위: %)

국민 84%,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



질문: 귀하는 국민연금이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필요하다(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7. 21. ~ 7.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실제로, 수급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그렇다' 48%, '그렇지 않다'는 43%를 차지해 [지난 해 7월 조사](#)(38%) 대비 부정적인 응답이 소폭(5%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나눠서 보면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의 결과를 보면 '수급 연령이 돼도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최대 10%포인트까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만 18-39세는 3명 중 2명(68%)이, 40대는 57%가 수급연령이 되어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전망하며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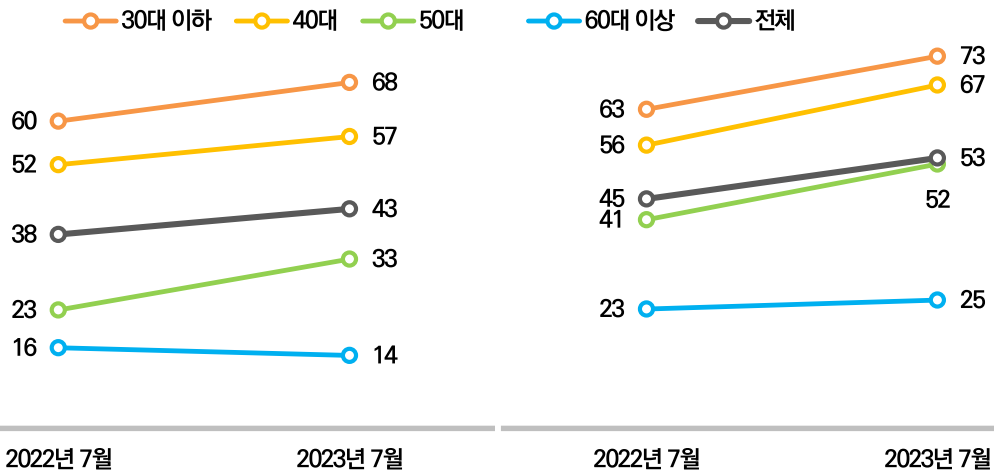
또, 예적금·주식보다 국민연금 가입이 더 낫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53%를 차지해 [작년](#)(45%) 대비 8%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최대 1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만 18-39세, 40대에서는 약 70%에 해당하는 인원이, 50대에서는 과반수(52%)가 국민연금이 예적금·주식보다 못하다고 평가했다.

1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50대 이하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하락, 부정적 평가 늘어

(단위: %)

"향후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응답

"예·적금, 주식 등의 재테크가 국민연금 가입보다 낫다" 응답



질문: 향후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교: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7. 15. ~ 7. 18. // 2023. 7. 21. ~ 7.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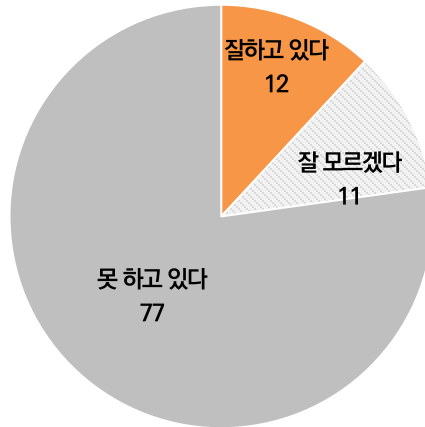
질문: 예·적금, 주식 등의 재테크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더 낫다
 비교: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7. 15. ~ 7. 18. // 2023. 7. 21. ~ 7.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지난 1년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치권 활동, 부정적 평가 77%

전술한 결과들을 통해 그동안 진행되어 온 정치권의 연금 개혁 과정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 역시 이뤄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은 결과, 77%는 '못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12%에 그쳐 싸늘한 민심을 알 수 있다.

(단위: %)

지난 1년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활동, 못 하고 있다 77%

질문: 지난 1년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치권(정부, 국회 등)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비고: 잘하고 있다(매우+대체로 잘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매우+대체로 못 하고 있다)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7. 21. ~ 7.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만 18-39세 청년 중**79%, 국민연금은 젊은 층과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제도****52%, 지금까지 낸 돈 돌려받고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어****59%, 국가 지원을 통한 만 18세 국민연금 가입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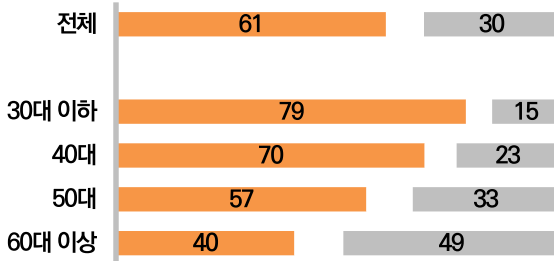
연금 개혁은 미래에 국민연금 재원을 책임질 청년 세대의 동의가 절실하지만, 청년들 사이에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불안감이 팽배하여 연금에 관한 논의 자체를 시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현재 젊은 층과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61%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만 18-39세 청년은 대다수(79%)가 이에 공감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심지어 지금이라도 낸 돈을 돌려받고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다는 응답은 전체로 봤을 때 36%에 불과하지만, 만 18-39세에서는 과반수(52%)를 차지해 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만18-39세 청년 79%, ‘국민연금’은 현재 젊은 층과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제도’

(단위: %)

“국민연금 제도는 현재 젊은층과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제도이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질문: 국민연금 제도는 현재 젊은층과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제도이다

비고: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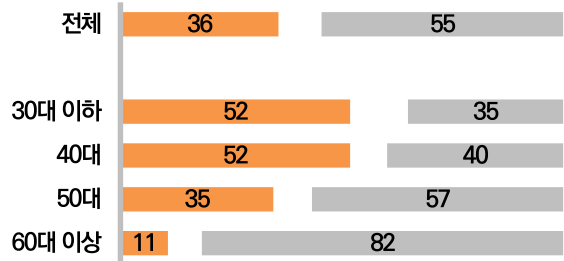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3. 7. 21. ~ 7. 24.

만18-39세 청년 52%, 지금이라도 낸 돈 돌려받고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어

(단위: %)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낸 돈을 돌려받고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질문: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낸 돈을 돌려받고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다

비고: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7. 21. ~ 7.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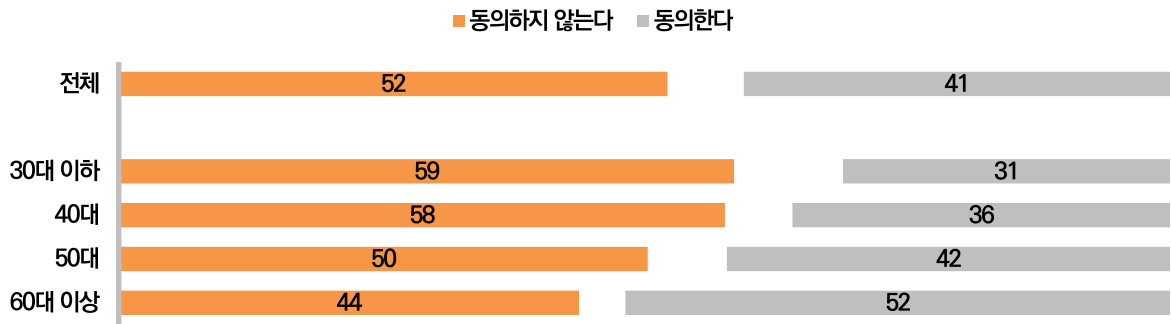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정치권은 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의 동의를 구하고자 연금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년들의 연금 효능감을 높이고자 [만 18세가 된 모든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만 18-39세 청년의 과반수(59%)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도입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18-39세 청년 59%, 국가 지원을 통한 만18세부터 국민연금 가입 동의하지 않아

"청년들을 국가가 지원하여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시켜야 한다"

(단위: %)



질문: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을 국가가 지원(예. 첫 1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가 지원)하여 만18세부터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고: 동의한다(매우 + 대체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7. 21. ~ 7.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국민연금 개혁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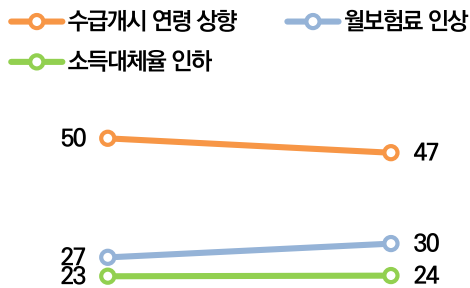
보험료 또는 소득대체율 조정에 앞서 수급개시 연령(47%)부터 손봐야 월보험료 인상 시 선호하는 개혁 방향은 세대 간 상반된 의견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위주로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47%)이 급선무라고 대답했다. 반면, 월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는 각각 30%, 24%에 그쳤다. 이를 통해 월보험료, 소득대체율 조정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늦은 나이부터 수급하는 것도 함께 고려하여 개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엿볼 수 있다.

만약 월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현재보다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겠다'는 응답이 47%, '조금 더 내고, 현재 수준만큼 받겠다'는 53%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의견 차이가 명확해진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는 '조금 더 내고, 현재 수준만큼 받겠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는 기금 고갈 문제로 인해 수급 연령이 되어도 국민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연금 개혁 시 '수급개시 연령 상향'(47%)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가장 많아

(단위: %)



2022년 7월

2023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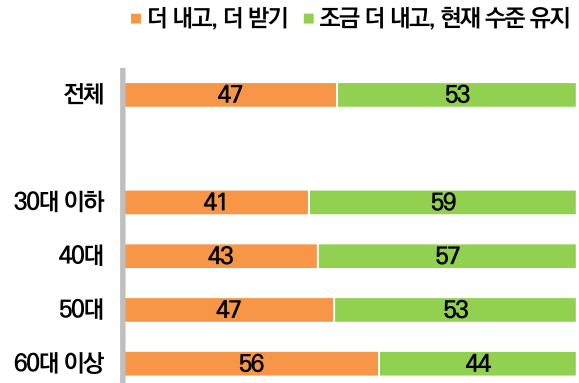
질문: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면 다음 항목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7. 15. ~ 7. 18. // 2023. 7. 21. ~ 7. 24.

월보험료 인상 시 선호하는 개혁 방향, 세대별로 차이 나타나

(단위: %)



질문: 만약 국민연금 월보험료를 현재 9%에서 더 올리게 된다면, 어떤 방향의 개혁을 선호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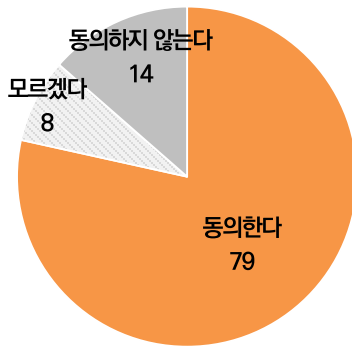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3. 7. 21. ~ 7. 24.

미적립 부채 공개 79%,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76%

이처럼 국민연금 수급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보니 응답자의 대다수(79%)는 개혁 논의 과정에서 '미적립 부채(이미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액 대비 부족한 액수)'를 공개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또,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 방안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정부가 세금 등으로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국가 지급 보장' 법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76%가 동의했다.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미적립 부채' 공개해야 한다, 79%

(단위: %)



질문: 이미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액 중 현재 준비되어 있는 금액 대비 부족한 금액을 '미적립 부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미적립 부채'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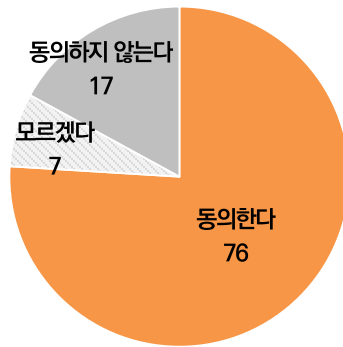
비고: 동의한다(매우 + 대체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7. 21. ~ 7. 24.

기금 고갈 시 '국가 지급 보장' 법조항 명문화해야, 76%

(단위: %)



질문: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정부가 세금 등으로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국가 지급 보장' 법조항 추가(명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고: 동의한다(매우 + 대체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7. 21. ~ 7.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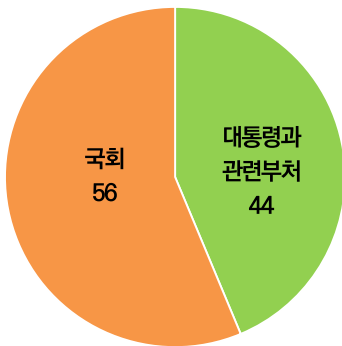
연금 개혁 책임지고 주도해야 하는 주체, 국회 56% > 대통령 44% 국민 68%,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 금융·투자 전문가 다수 위촉해야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안도 많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부담을 더 지운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이 예상되다보니 국회와 정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누가 책임지고 주도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 56%는 '국회'를, 44%는 '대통령과 관련 부처'라고 답했다. 즉, 연금 개혁의 핵심 요소인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에 보다 적합한 국회가 책임지고 주도하길 바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 연금 개혁 과정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정부, 시민단체, 노조, 사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투자 전문가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68%는 기금운용위에 금융·투자 전문가를 다수 위촉하여 운용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과 직결된 사안이기때 기금운용위에 투자 전문가 위촉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금 개혁 책임지고 주도해야 하는 주체, 국회(56%) > 대통령과 관련부처(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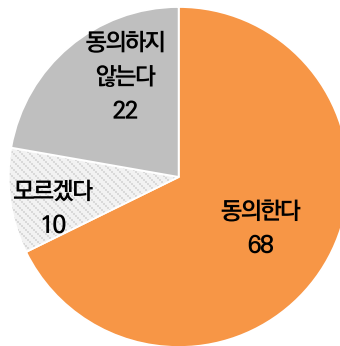
(단위: %)



질문: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누가 책임을 지고 주도해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7. 21. ~ 7. 24.

국민 68%,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 금융·투자 전문가 다수 위촉해야

(단위: %)



질문: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에 금융·투자 전문가들을 다수 위촉하여 운용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고: 동의한다(매우 + 대체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7. 21. ~ 7.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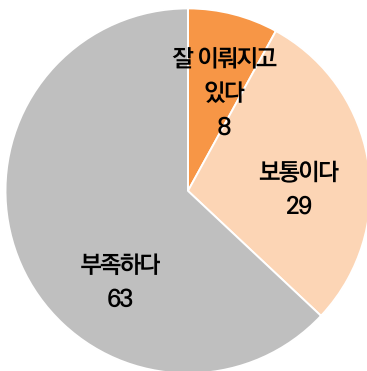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잘 이뤄지고 있다' 8%에 불과 국민 대다수(84%),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공론화위원회 구성해야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개혁 방향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난립하는 가운데 이를 조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지고 있다' 평가는 8%에 그쳤다. 정치권과 국민뿐만 아니라, 국민 간에도 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 대립이 팽팽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설득 과정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연금 개혁 성공의 핵심 조건이 '사회적 합의'임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개혁을 위한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응답자 84%는 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즉, 정치권에 의한 일방적인 개혁이 아닌, 국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및 교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잘 이뤄지고 있다' 8%에 그쳐

(단위: %)



질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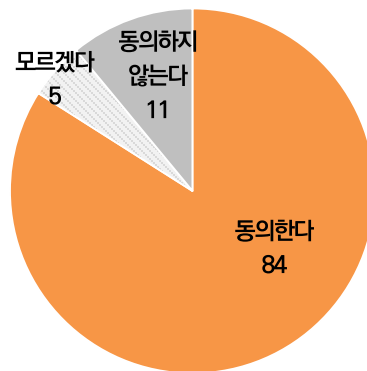
비고: 잘 이뤄지고 있다(매우 + 다소 잘 이뤄지고 있다), 부족하다(매우 부족하다 + 부족하다)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7. 21. ~ 7. 24.

국민 84%,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공론화위원회' 구성 필요

(단위: %)



질문: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고: 동의한다(매우 + 대체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7. 21. ~ 7.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연금 개혁을 둘러싼 수많은 갈등과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국민'이 소외된 채 정치권의 일방적인 개혁 논의가 이어진다면 사회적 합의라는 목표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위해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3년 7월 기준 전국 89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3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7,521명, 조사참여 1,308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3.3%, 참여대비 76.5%)
조사일시	• 2023년 7월 21일 ~ 7월 24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